

전남광주통합시의회 초대 의장 선거 물밑 경쟁 치열

4선 김성일·송형근 경합...3선 심철의·조석호 거론 민주 광역의원 당선인 워크숍서 입지자들 격론 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초대 의장 자리를 놓고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수적 우위를 확보한 전남권 의원 간의 대결이 전망되면서 캐스팅보트는 광주권 의원들 쪽 것이라 분석된다.

1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의회 초대 의장으로 4~5명이 지천

타전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전남에선 4선 김성일(해남1)·송형근(고흥1) 의원을 필두로 3선은 전경선(목포5) 의원 등이 거론된다. 광주에서는 3선 심철의(서구4)·조석호(북구3) 의원이 유력하다.

의장단 선거는 광주 기본조례와 전남 회규칙에 따라 다음달 1일 오전 7시 1차

임시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치러진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25~26일이며, 29일 후보자 연석회의가 예정돼 있다.

전남권에서는 이미 일부 의장 입지자들이 물밑 활동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고, 광주권에서도 통합시의회 출범 초기 전남과 광주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반기와 후반기 의장을 전남·광주가 나눠 맡는 방식의 배분론이 거론된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통합해 출범하는 첫 의회인 만큼 단순한 다수과 경쟁을 넘어 지역 균형과 통합 상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통합특별시의원 91명 중 전남권 의원이 63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선수 역시 전남이 앞서는 만큼 전남권 의원들의 대결로 압축된 형국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의견이다.

더구나 최근 전남권 재선·3선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최다선과 통합 중심'의 의장단 선출 논의가 이뤄지며 광주권 의장 배출이 더욱 어려워 보인다.

다만, 오는 16~17일 이틀간 보성에서 열리는 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 워크숍이 향후 의장단 구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크숍에서는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풀기 위한 무제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선과 추대 여부를 놓고 입지자들의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광주·전남 시도당 양 위원장은 통합시의회 의장 선출과 관련해 별도의 당 차선 선출 결의가 이뤄지며 광주권 의장 배출이 더욱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지역별로 사전에 안배할 경우 의원 자율선출 원칙과 충돌할 수 있어 내부 조율 과정에

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한 당선인은 "통합특별시의회의 안착을 위해서는 의장뿐 아니라 상임위원장 배분도 균형감 있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통합의 취지에 맞게끔 시도의회가 통합되는 만큼 통합의 초기부터 힘겨루기보다는 화합과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오후 세종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당선인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공식 행사로, 향후 대한민국 유·초·중등 교육을 이끌어갈 지방교육자치의 비전을 공유하고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대중 망명기록 첫 공개 “지방자치 복원·균형발전 제시” “서울 집중 국가안보 위협”...지방분권 등 철학 재조명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 6·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을 맞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망명 시절 민주화·평화통일 활동을 담은 미공개 기록을 공개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14일 일본 국제대학 도모히토 시노다 교수가 지난 4월 기증한 김 전 대통령의 서한과 관련 자료에 대한 사료 평가를 마치고 일반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개된 자료는 1984년 미국 망명 중이던 김 전 대통령이 에드워드 케네디 미국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과 한국 인권문제연구소 소식지에 실린 임정문 '기묘한 선 한국의 민주주의: 나의 견해와 제안', 미국 유력 언론 보도자료 등이다.

기념관은 이번 자료가 1980년 미국 망명 이후 한국 민주주의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국제사회를 상대로 설득과 여론 형성에 나섰던 김 전 대통령의 활동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정문에는 훗날 김대중 정치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남북 화해협력 구상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임정문에서 "한국전쟁 시기에도 지방자치제도는 존재했지만 이후 권력의 중앙집중이 심화되면서 서울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비정상적 성장을 겪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체 인구의 25%와 유통화폐의 70%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며 "이러한 불균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국가 안보마저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

다. 또 "독재정권이 지방자치를 중단한 것은 국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속한 지방자치 복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40여년 전 김 전 대통령이 이미 지역 불균형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남북관계에 대한 구상도 눈길을 끈다.

김 전 대통령은 임정문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어떤 형태의 회담도 환영한다"며 "남북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국·일본·중국·소련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낸 햇볕정책의 밑그림으로 해석된다.

또 미국 망명 활동과 관련해 "15개월 전 미국에 도착한 뒤 미국 정부와 의회, 언론, 학계, 종교계, 인권단체 등을 접촉하며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의 관심은 개인적 정치적 미래가 아니라 미국 내 사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속할 것인가에 있다"며 "가장 큰 소망은 조국으로 돌아와 사랑하는 국민과 다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라고 밝혀 귀국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듬해인 1985년 귀국해 이른바 '북풍의 귀국'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후 신민당 돌풍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흐름의 중심에 섰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광주대 전환기획위, 기업유치·재정기획 TF 신설

AI·반도체 투자유치·재정특례 확보 핵심 과제 전망 농업·해양수산·교육·체육 등 6개 특별위원회 구성

민행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 전환기획위원회는 통합특별시 핵심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개 테스크포스(TF)와 6개 특별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통합특별시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조직으로 평가받는 기업유치TF와 재정기획TF가 신설됐다. 기업유치TF는 정은승 대전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미래 전략산업 투자 유치와 성장동력 확보 방안 마련을 총괄한다. 실무는 손경중 한국사시물인터넷협회 상근부회장이 TF팀장으로 참여해 이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자문 체제도 구축했다. AI 및 경제전략 전문가로 평가받는 임문영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전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이 AI·반도체 특별자문위원으로 참여해 관련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재정기획TF는 백승주 대전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재정 통합 방안과 재정특례 확보, 국가재정 지원 확대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에 나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농업대전환, 섬해양수산, 교육대전환, 체육건강도시, 지역균형발전, 대통합공약추진 등 6개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기존 7개 분과위원회와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 조직으로, 분야별 현안과 전문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는 이규현 전남도원이 위원장을 맡아 농업 분야 전반을 총괄한다. 남경우 전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와 이광우 광주전남산림조합협의회장이 각각 축산과 임업 분야 발전 전략 수립에 참여한다. 섬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김현덕 순천대학교 물류비즈니스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해양물류 분야와 특유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임한규 목포대학교 수산생명의학과 교수와 박준택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해양수산 분야를, 이주빈 조 선대학교 외래교수가 섬 정책 분야를 담당해 세부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대전환특별위원회는 박현주 전 조 선대학교 부총장과 정은경 전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지역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인적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유치의 핵심 기반인 정주형 교육도시 조성 방안을 모색한다. 체육건강도시특별위원회는 김현우 조 선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엘리트체육 육성, 시민 건강 증진 정책 등을 논의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최형식 전 담양군수가 위원장을 맡아 광주와 전남,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대통합공약추진특별위원회는 김일주 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아 통합특별시 주요 공약의 실행 방안을 점검하고 추진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대전환기획위원회는 이날 TF와 특별위원회 구성에 맞춰 운영지원단도 출범시켰다. 변원섭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장을 운영지원단장으로 임명해 위원회 운영과 활동 지원 업무를 맡겼다. 대전환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TF와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통합특별시 핵심 과제와 분야별 현안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안을 폭넓게 수렴해 논의의 결과를 백서로 충실히 담고,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곧바로 실행 가능한 정책 과제에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최대통령, 레오14세 교황 면담 ‘하느님의 품’ 조각상 등 선물

교황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을 면담하고 '하느님의 품'이라는 이름의 조각상을 선물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아' 이야기를 초형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인간에 대한 연민과 용서, 화해와 공동체의 회복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선물로 정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아울러 백자 다용도 합도 선물했는데, 한국 백자 특유의 정갈함과 비움의 미학이 사제의 청빈·성찰의 가치와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연합뉴스

전남광주특별시-경남도, 민선 9기 영호남 상생협력

남해안권발전특별법·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공동 대응

7월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특별시와 경남도가 민선 9기에도 영호남 상생협력 기조를 이어간다.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준비 중인 전남광주대 전환기획위원회는 15일 경남도 민선 9기 도정 청사진을 준비하는 경남대도 약준비팀이 방문해 양 지역 공동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민선 9기 경남도의 협력 체계를 미리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지난해 5월 체결한 영호남 상생협력 선언을 바탕으로 남해안권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남해안권발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측은 남해안권이 풍부한 해양관광 자원과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 성장에 제약 받고 있다고 보고, 규제 완화와 특례 부여,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경남 사천의 우주항공청·우주항공국가산단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연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특별

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측은 우주항공산업이 국가 미래 전략산업인 만큼 영호남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경남도도와준비팀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자구의 개발률이 낮은 점을 설명하며 독립적인 경제자유구역 운영 필요성을 제기했고, 전남광주대 전환기획위는 경제자유구역 체계 개선 논의가 지역 간 경쟁이 아닌 상생 발전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향후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공동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민주당 독점적 통합시의회 운영 중단을”

박형대·강광석 등 진보당 광역의원 당선인들 촉구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자들이 15일 통합특별시의 출범 준비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독점적 의회 운영 중단과 시민 주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형대·강광석·윤민호·최경미·신연순 등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들은 1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보당을 배제한 간접선거가 민주당 단독으로 구성됐다”며 “회의 내용마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민주주의의 실종이자 독선적 의회 운영의 예고”라며 “간접선거에 진보당을 포함하고 그간 협의 내용을 모든 당선자와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상임위원회 구성, 교섭단체 요건, 출범 조례 처리 등 특별시의회 운영 방향을 정하는 핵심 사안은 의원들만의 내부 논의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명칭 변경 등 간단한 조례도 있지만 행정기구 설치 등 깊은 심의가 필요한 조례도 있는 만큼 개원 첫날부터 집행부 거수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통합특별시청과 시의회 소재지 결정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출범 조례안에 대한 안정적 심의권 보장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심의 시 공청회 추진, 상임위 구성 및 교섭단체 요건 등 의회 운영 계획 시민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